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5면
시민 생명 구한 소방관에 '의로운시민상' 수여

전주매일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음 1월 5일) 제319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농수산물 유통 현장 속으로

김관영 도지사, 익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초매식 참석… 풍년·활성화 기원

군산원예농협 공판장서 지역농협장과 간담회 열고 농업인 애로사항 청취

김관영 도지사가 도내 농수산물의 유통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기 위해 새벽부터 출장근무에 나섰다.

〈관련사진 3면〉

김 지사는 특히 농수산물의 첫 위판(경매)을 시작하는 초매식에 참석해 풍년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기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25일 새벽 6시 김관영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한병도 국회의원과 서거석 도교육감, 군산시장, 군산·익산 도의원, 지역농협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초매식(첫 경매) 참여와 군산지역 농협과의 간담회를 각각 가졌다.

김 지사는 초매식과 경매 진행상황 등을 지켜본 뒤 익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지사는 익산에 이어 군산원예농협 공판장으로 자리를 옮겨 군산원협장 등 5개 지역농협장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현장 관계자들과 군산의 명물 짬뽕라면으로 조식을 함께 하면서 농산물 경매상황과 운영현황 등에 대해 소통의 자리를 이어갔다.

한편 도내에는 농산물 수급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도매시장 3곳(전주, 익산, 정읍)과 공판장 4곳(전주, 군산, 남원, 김제)이 있다. 도내 도매시장과 공판장은 농업인이 출하한 농산물을 응찰하고 낙찰받아 14개 시군의 소매상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도 도내 도매시장(3개소)과 공판장(4개소)에서 이루어진 거래물량은 15만9,242톤 금액으로는 3,412억원이며, 이중 익산도매시장은 4만3,621톤 982억원, 군산원협 공판장은 1만2,368톤 297억원이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북을 우리나라 농생명수도로 만드는 것"이라며, "3년 후 정도면 스마트팜 면적이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나 농가와 소비자의 가교를 담당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도에서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내 노동자가 차별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북도 노동권익센터가 25일 전주 나우빌딩에서 개소한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박두영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김동창 전북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갖고 있다

도내 노동자 권익 보장·증진

전북도 노동권익센터 개소

비정규직센터에서 개편해 수혜 대상 확대

노동법률 상담 지원·교육 등 인권 증진 도모

도내 노동자가 차별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권익센터가 들어섰다.

전북도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가 25일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자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운영한 '전라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로 확대·개편하는 '전라북도 노동기본조례'를 지난해 5월 제정했다.

이에 개소한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 지원, 전라북도의 노동실태조사 및 기초 통계 구축, 노동법 관련 교육, 노동정책 연구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 등을 위한 업무를 맡는다.

사무실은 전북도청 인근에 있는 나우빌딩 2층에 위치했고, '차별없는 노동사회네트워크'에서 수탁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된다. 센터장, 공인노무사(2명)를 포함해 전체 8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노동권익센터가 코로나19와 경제침체, 급속한 사회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훌륭한 조력자가 되길 희망한다"며, "전북도는 모든 도민이 노동을 통해 삶과 희망을 일굴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기업과 노동자가 화합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도내 발생 건수 없었다

도,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 제정
안전계획 내 수립내용·재해발생시 조치 절차 규정 등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따라
내달 1일부터 중대재해예방 지원센터 운영, 지속 홍보

전북도는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재해 예방체계 구축에 매진한 결과 1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그간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행정 과제화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 점검, 개선 조치하는 환류 체계를 반기별로 시행해 도지사 관할 사업장과 종사자, 대상 시설물과 이용자에 대한 사고 예방에 힘썼다.

지난해 3~5월 중대재해예방 안전계획 수립 이후 법무·노무전문가로부터 법적 의무사항 과제화 및 추진방법의 적정성, 계획대로 이행시 면책가능 여부를 자문받았다. 그 결과 소방본부 차원의 안전전담팀 설치 필요성을 발굴·건의했고, 팀을 신설했다.

또한, 2022년 10월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담당부서 지정 및 안전계획 내 수립내용, 재해발생시 조치절차를 규정하는 등 업무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용역도 추진해 소속 공무원 등 종사자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등을 예측하고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노력했다.

또한 지난해 상·하반기 중대재해 안전계획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7개 위험요인을 발견했고, 이 중 3건은 조치를 완료했다. 개보수 예산을 확보한 4건은 2023년도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도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이 사전에 법적 의무사항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 2월 1일부터 중대재해예방 지원센터(063-280-2782, 2783)를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며, "저를 포함한 지자체장과 기업 경영책임자가 관할사업장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소규모 민간 사업장이 안전확보에 노력한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전북 119구급대 지난해 이송환자 중 60%가 60대 이상'

지난해 전북의 119구급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3.3분마다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 구급활동 통계분석 결과 119구급대는 3.3분마다 출동했다. 이는 하루 평균 432.6건 꼴이다.

전북소방은 지난 한 해 동안 963명의 구급대원이 15만7,903건 출동해 8만9,855명을 이송했다. 이는 2021년 대비 출동건수 1만4,618건(10.2%), 이송 건수 1만675건(13.8%), 이송 인원은 1만399명(13.1%)이 각각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1만9,970명(22.2%), 70대 1만8,323명(20.4%), 60대 1만5,530명(17.3%) 순이었다. 전체 이송환자 중 60대 이상의 환자가 약 60%를 차지, 전북지역 인구 고령화로 노인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북소방은 분석했다.

/뉴시스